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성명	수험 번호
----	-------

1. (가), (나)는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민주 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한 대표 기관 구성권을 보유하고,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 ① (가)는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 ② (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 ③ (가)보다 (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 ④ (나)보다 (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 ⑤ (가), (나) 모두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학습 주제 :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 학습 내용 : 법치주의의 유형
 (가) :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만 강조
 (나) :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시

- ① (가)는 '법의 지배'로, (나)는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된다.
- ② (가)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나)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한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④ 입헌주의는 (나)가 아니라 (가)에 의해 구현된다.
- ⑤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

3.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언론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치는 사회의 공공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정치의 공적 책임이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진다면, 부적절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이 정치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정치인들은 그 같은 행동을 할 동기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대의제에서 언론은 정치인의 무능, 부패, 권력 남용을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정치의 공적 책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 ①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 ②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 제공
- ③ 정부 정책에 대한 주요 의제 설정
- ④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과 태도 형성
- ⑤ 다양한 정치적 이익 및 의사의 집약

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국민 건강 증진법은 PC방 운영자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PC방을 운영하는 갑은 이 법률의 해당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이 사건 금연 구역 지정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그 방법도 적절하다. …(중략)…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후략)…”라고 판단하였다.

— <보기> —

ㄱ. 갑은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한다.
 ㄴ. 갑이 헌법 재판소에 제기한 것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ㄷ. 갑은 국민 건강 증진법의 해당 조항이 자신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ㄹ. 헌법 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심사하였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5.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다툼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도 없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다. 따라서 개인들이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연 상태는 불안정하다. 이러한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 ① 국가 성립 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사회 계약 후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 개인들의 모든 권리는 포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③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작용을 바탕으로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 ④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낳는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성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⑤ 국가를 개인들의 생명, 자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계약 이전에 성립된 제도로 간주하였다.

6. (가), (나)는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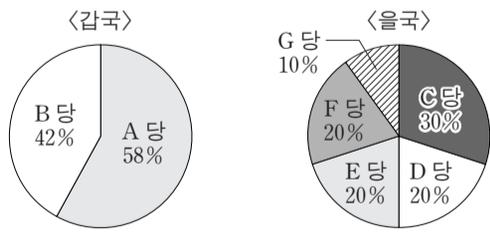
- ① (가)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 ② (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받고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행정 수반의 임기는 엄격하게 보장된다.
- ③ (나)에서 행정 수반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 ④ (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행정 수반은 최후 수단으로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다.
- ⑤ (가), (나) 모두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위해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을 허용한다.

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질병·부상·출산에 대해 의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A**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이 원리에 따라 경제적 약자에 대해 의료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보기>—
- ㄱ.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 ㄷ. 개인의 운택한 삶에 필요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ㄹ. 자본주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한 빈부 격차와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 갑국과 을국의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갑국보다 을국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
 - ㄴ.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연립 정부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 ㄷ. 을국보다 갑국에서 정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ㄹ. 을국보다 갑국에서 소수 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갑국~병국의 행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은 온실 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했으나, 국가별로 감축 목표가 설정되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
- 을국은 ○○국 내전 중 발생한 대량 학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병국은 다자간 상호 방위 조약 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 목적은 주변국들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고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① 국가는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한다.
- ②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국가 간 상호 협력이 우선한다.
- ③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일치한다.
- ④ 국내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국가 간 상호 협력이 무시된다.
- ⑤ 개별 국가의 행위에는 자유주의보다 현실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10.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의회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 차이가 작으면 비례성이 높고, 차이가 크면 비례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정치학자 A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가 많을수록 비례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학자 B는 대표 결정 방식만이 비례성과 관련이 있고 대표 결정 방식 중 비례 대표제하에서만 비례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A, B의 주장과 다음 표의 갑국~정국 선거 제도에 근거할 때, 선거 제도 변경에 따른 비례성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가	현행 의회 선거 제도	
	선거구제	대표 결정 방식
갑국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을국	소선거구	절대 다수제
병국	중선거구	소수 대표제
정국	대선거구	비례 대표제

학생: _____ (가) _____

- <보기>—
- ㄱ. A에 의하면, 을국이 갑국과 같은 대표 결정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비례성이 높아져요.
 - ㄴ. A에 의하면, 병국이 을국과 같은 선거 제도로 변경할 경우 비례성이 낮아져요.
 - ㄷ. B에 의하면, 병국이 정국과 같은 선거구제로 변경할 경우 비례성이 높아져요.
 - ㄹ. B에 의하면, 정국이 갑국과 같은 선거 제도로 변경할 경우 비례성이 낮아져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사례를 범죄의 성립 과정에 적용할 때, 밑줄 친 갑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평범한 회사원 갑은 옆에 사는 을의 집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였다. 을에게 연락을 취하고 소방서에 신고도 하였으나 불은 순식간에 번져 갑의 집에도 옮겨 붙을 상황이었다. 갑은 부득이하게 을의 집 대문을 부수고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을은 갑의 대문 파손 행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갑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보기> —

- ㄱ. 갑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ㄴ. 갑의 행위는 위급한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ㄷ. 갑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ㄹ. 갑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자구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13]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년 5월 10일	갑이 을로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값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 줌.
2013년 8월 30일	병이 갑 소유의 A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13년 9월 30일	병이 A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며 확정 일자를 받음.
2013년 11월 7일	갑이 정으로부터 2014년 5월 7일까지 값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리면서 A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줌.
2014년 2월 11일	① 을이 갑을 상대로 1억 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소송을 준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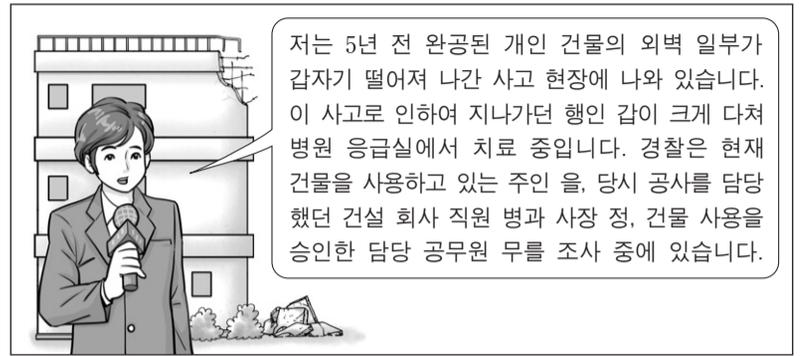
12. 위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정은 2013년 11월 7일부터 A 주택을 점유할 수 있다.
- ② 을과 정의 채권액은 A 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 ③ 병은 A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을, 정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을이 1억 원을 빌려 주면서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2013년 11월 7일에 A 주택 등기부 을구에는 정이 A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이 기재된다.

13. 위 자료의 밑줄 친 ①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을이 A 주택을 가압류한 경우 갑의 A 주택 처분이 제한된다.
- ② 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 ③ 을은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을은 정식 재판이 아닌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⑤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을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병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한다.
- ③ 병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정은 병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무의 과실이 증명되면 국가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⑤ 정확히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갑은 누구에게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취업 동의서

1. 법정 대리인: A (인적 사항)
 2. 연소 근로자: B (인적 사항)
 3. 사업장: ○○ 대형 마트 (주소)
 4. 사용자: C (인적 사항)

본인은 B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B가 ○○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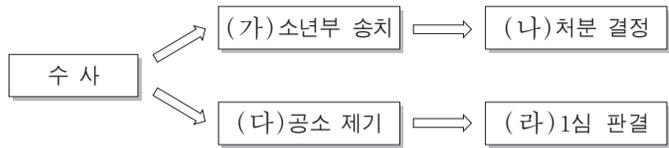
2014년 7월 4일
 법정 대리인 A (서명)

— <보기> —

- ㄱ. B는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인 자일 것이다.
- ㄴ. A는 B의 보호를 위하여 B의 근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 ㄷ. B와 C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 B는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을 보장받는다.
- ㄹ. B가 C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업 동의와는 별도로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은 형사 피의자 갑(17세)에 대한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는 (가)와 달리 (다)를 결정하기 전에는 갑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가)에서 갑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갑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기록된다.
- ④ (다) 이후에도 갑은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라)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도 갑은 항소할 수 있다.

1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 은/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B** 은/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한다.
- **C** 은/는 상고심 관할권과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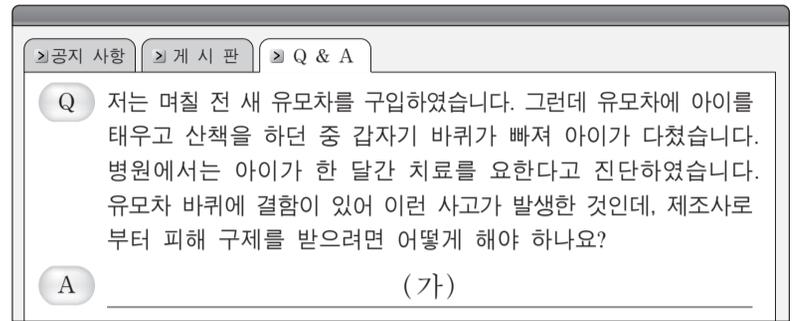
- ① A는 국가 예산의 수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감사의 권한을 가진다.
- ② A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중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B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 ④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B의 심의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C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1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년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한정 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인, 친족, 검사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장도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청구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① ㉠은 자연인과 법인의 법률 행위에 적용된다.
- ② ㉠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후견을 한정 치산과 금치산으로 유형화하지 않고 일원화 하였다.
- ④ ㉠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면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행위 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 ⑤ ㉠에 의해 후견이 개시된 자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거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ㄱ. 유모차 제조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ㄷ.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ㄹ.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유모차 바퀴의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년 5월 정부는 주요 핵 안보 규범인 ㉠ '핵 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의 비준서를 국제 연합(UN)에 기탁*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94번째 비준서 기탁국이 되었다. 정부는 2005년에 이 협약에 서명하고 2011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여러 가지 국내 사정에 의해 2014년 5월에 기탁하게 된 것이다.

* 기탁: 조약 체결 당사국이 비준서를 제출하여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하는 행위

- ① ㉠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 ② ㉠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 ③ ㉠은 비정부 국제기구와 체결한 양자 조약이다.
- ④ ㉠은 2005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 ⑤ ㉠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과 같이 국제 사회 일반에 적용 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